

일본국의역사교과서왜곡중단촉구결의안

의안 번호	651
----------	-----

발의연월일: 2001. 2. 27

발 의 자: 김원웅 · 이낙연
박명환 · 이부영
윤한도 · 강성구
이창복 · 장영달
이미경 · 이상득
김경천 · 남경필
김덕규 의원

찬 성 자: 93 인

주 문

일본국은 다음 세대를 담당할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 줌으로써 아시아 제국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여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에게 조작된 허구의 역사를 가르치는 한, 일본국은 아시아와 세계로부터 고립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국 정부는 이번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과거사 날조를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최소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를 요구한 1982년 일본국 문부과학상 담화에 충실하게 검정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2. 일본국의 정계·교육계·언론계를 포함한 지식인 사회는 전전(戰前) 일본국의 굴절된 역사교육이 가져온 불행을 상기하여 일본국의 다음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도록 협력할 것을 우리는 요청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일본국 대중문화에 대한 추가 문호개방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공식문서에서 사용되는 일본국 ‘천황’호칭을 재고할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4. 한일의원연맹은 일본국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합동회의를 조속히 소집하고, 역사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의원연맹의 친교활동을 중단할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5. 아시아 여러나라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국의 시대착오적인 역사왜곡 움직임을 주시하고, 시정을 촉구하는데 동참할 것을 우리는 기대한다.

제안이유

2002년부터 사용될 일본국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신청본들이 과거사를 일제히 축소 또는 왜곡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우리는 개탄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일본국의 특정 단체가 제작하여 검정을 신청한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과 일본국의 합병을 정당화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등 역사를 광범위하게 날조하고 있다고 하는 바, 이에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일본국의 이러한 역사교과서 왜곡은 일본국의 군국주의의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나라에 대한 도전이며,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이다. 또한 ‘양국이 과거를 직시하고 상호이해와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던 1998년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을 뒤집은 것이다.